

## 하도급 불공정 문제 놓고 건설브레인간 대리전

기사입력 2012-01-25 15:53:01 |

폰트 + -  

### 정책연, 건설하도급 부당특약 억제책 시급

### 건산연, 2차 하도급 불공정 해소책이 더 급해

정부의 하도급 불공정 정책을 놓고 종합·전문건설단체의 정책 브레인들이 팽팽히 맞섰다.

전문건설협회 산하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25일 '건설하도급 부당특약의 실태와 개선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건설경기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부당특약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는 움직임이 심화되고 있어 억제 방안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정책연의 설문 결과를 보면 표준하도급계약서 변경을 통한 부당특약 빈도는 계약보증금 성격을 실손이 아닌 위약벌로 변경하는 사례가 최다였고 불가변동 시 공사대금 증액지급 조항 삭제, 민원발생 시 하도급자의 처리부담 신설, 추가공사 및 설계변경 시 공사대금 증액 배제, 4대 보험료 부담 전가, 법정 하자보수기간 및 금액 초과변경이 뒤를 이었다.

정책연은 부당특약 억제책으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및 서면교부 활성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부당특약 유형 보완, 중요 계약조건 삭제행위에 대한 규제 신설, 부당특약 조항 무효화를 제언했다.

이종광 연구위원은 "하도급계약 내용이 사적자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간 대등한 입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면 당연히 존중해야 하지만 실제 하도급관계는 원도급사가 우월하고 남용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제어할 규제도 불가피하다"고 제언했다.

반면 대한건설협회 산하 건설산업연구원은 '건설하도급 불공정 개선정책 평가 및 보완방안' 보고서를 통해 건설산업 공생정책이 원도급자 규제 위주로만 흐른다고 반박했다.

하도급대금 직불제만 해도 하도급자가 부도, 잠적하면 근로자,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이 어려워져 법적 책임이 없는 원도급자가 해결해야 한다.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 시공관리 조정권을 약화시키고 유기적 협력에 기초한 공사수행을 어렵게 해 공기가 늘고 품질이 저하될 뿐 아니라 전문건설사간 불공정 하도급도 키울 것으로 우려했다.

건산연은 2차 하도급 불공정 문제도 제기했다. 고용노동부의 현장임금 체불 실태조사(2010년 12월 시행) 결과를 보면 하도급업체의 체불비율이 전체 조사업체 대비 80.7%였고 국토부의 건설현장 자재·장비 대금지급 실태조사(2009년 9월)에서도 적발업체(453곳)의 71.3%(323곳)가 하도급사였지만 2차 하도급 불공정에 대한 규제는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강운산 연구위원은 "2차 불법하도급 양산 등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공생 정책의 보완이 시급하다"며 "특히 주계약자 공동도급이나 하도급대금 직불과 관련해 일방적 목표수치를 정하는 일부 기관의 행태는 발주자 자율과 책임을 저해하고 시공현장의 갈등만 키울 수 있다"고 경계했다.